

## 국가긴급재난금의 취지는 소비(자)를 살리는 것이다



(사)소비자권익포럼 정책위원장,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긴급재난금은 말 그대로 국가적 재난을 맞아 긴급하게 투입하는 돈이라는 의미이다. 즉 당장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일부 학자는 이 긴급한 시기에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1/4분기 DGP 경제성장률은 -1.4%로 뒷걸음질했다. 이는 주변국에 비해 선방했다고 한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민간소비가 -6.4%를 기록한 것이 결정적이다. 소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우리경제에서 소비영역의 비중이 60%를 넘어 소비를 외면한 경제는 논할 수 없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소비를 해야 소상공인도 살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소비를 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시장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소비할 여력이 없

어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개인적으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대 이인호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비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소비 증가를 통한 경제회복 효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

경영자총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현금이나 자금의 여력이 없어서 투자와 고용을 꺼리는가?

‘그 국가재원으로 기업을 지원해 기업이 고용한 소비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의 위축은 해당 업종의 투자수요 감소와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 충격을 통해 제조업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논리는 긴급자금을 기업에 지원해서 투자수요를 유발하고 공장과 시설을 세우고 그 뒤 생산과 고용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회복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가할 때 이야기이다. 지금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목을 조여 오는 숨통을 풀어 호흡을 하도록 할 때이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소비자가 구매해 주지 못(않)하면 당장 3개월을 넘기 수 없는 것이 일부 서비스 업종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구매하기 위해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 호주머니 여력이 되지 않으니 소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긴급한 사태를 바로 보아야 한다. 정부는 4월을 넘기지 말고 긴급재난금을 속히 지급하기를 바란다. ◆